

'도시·농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전주시, 농업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집중

전주시가 올 한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강화에 매진하기로 했다.

시는 16일 농업기술센터 신년브리핑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비전으로 한 농업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진 농업기술 확산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 기반 조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아가는 동물행복도시 실현이다.

먼저 시는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28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속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입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잠시 중단됐던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재개 등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가공·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농가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차세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영농초기 자본 부족으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임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반 시설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건실한 경영체로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청년농업인 양성 전문교육과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야열대작물 재배기반 확대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등 이상 기후 대응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과수 작물에 대한 시험 재배와 연구를 위해 도도동에 아열대과수 실증 시범포도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다변화를 이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 기반 조성과 첨단 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전주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은 올 연말까지 지역의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굴된 고립가구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고립가구 일상 회복 지원넷(net)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 모습)

위기·고립가구 일상 회복 지원

전주시복지재단, 지역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이 시민들의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고립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의료·복지·청소·위생 등 지역 전문기관들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개선, 청소·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올 연말까지 지역의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굴된 고립가구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고립가구 일상회복 지원넷(net)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립가구 판단도구'를 통해 발굴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의료 건강관리(건강검진, 상담) △식사 영양개선(균형영양식) △주거 청소·방역(저장형 박 청소·방역·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 건강관리의 경우, 장기간 건강관리에 취약한 위기·고립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하도록 하고, 의료상담을 통해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단은 또 식사 영양개선을 통해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이 필요한 위기·고립가구에 균형영양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립감 해소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끝으로 주거 청소·방역의 경우 저장형박 의식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한 청소와 방역을 지원하고, 저장형박 재발 예방을 위한 정리교육을 통해 생활공간 확보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돕게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7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진병원과 (사)대자인간건강사랑후원회, 전주병원과 (사)사랑나눔영양후원회가 참여하기로 했다. 주거 청소·방역 지원을 위해서는 (유)이크리월드와 (유)맑은누리,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위기·고립가구가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 능력을 키워 사회참여 기회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페스타' 완성도 높인다

시, 추진 방향 공유·축제 일정 정립 위한 기획 회의 가져

전주시는 1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전주페스타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세부 축제 일정 정립을 위한 기획 회의를 가졌다.

김인태 전주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전주페스타 2024' 기간에 개최되는 각각의 축제를 주관하는 각 부서장 등 21명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처음 진행된 지난해 축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주페스타 2024' 추진 방향을 정취하고, 올해 성공적인 축제시즌을 운영하기 위해 부서 간 일정을 협의했다. 또, 전주페스타가 나아갈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주페스타 2024'의 축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주의 맛을 중심으로 한 공

통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머무는 관광 및 외연 확장을 위해 야간콘텐츠를 상설 운영하는 등 통합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첫 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 2023'을 시범 개최했으며, 그 결과 전주페스타 축제 기간 약 65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14개의 다양한 축제를 즐겼다.

이후 시는 지난 12월 축제 평가보고회를 열어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와 용역기관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해당 의견들이 올해 축제 추진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왔다.

김인태 전주시장은 "올해 전주페



전주시는 1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전주페스타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세부 축제 일정 정립을 위한 기획 회의를 가졌다.

스타는 신속한 추진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콘텐츠 기획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풍성한 문화를 보여 줄 예정이다. 전주페스타가 전주시 대

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시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도심 속 방치된 빈집, 지속 정비 나선다

전주시,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추진

전주시는 올해 총 3억4,3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심 속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노후 건축물로 인한 붕괴 위험과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

상으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층 주거지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과 공용터발 등 주민공간으로 제공하거나 빈집을 리모델링 한 후 5년 이상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반값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과 썬지공원, 기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빈집 매입 및 생활 SOC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16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도심 지역 빈집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빈집정비사업 14개소, 빈집 매입 5개소 정도이다.

빈집정비 및 빈집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접수 기한 내에 건물등기 등 해당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5,000만원을 들여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192개소를 정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주차장 조성 6개소 △주민터발 4개소 △단순 철거 1개소를 추진했다.

시는 향후에도 빈집매입 사업과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연계해 방치된 빈집을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홍보하며, 자동차 소유자(연납 신청자)에 대해 5만5,000여 건, 156억3,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4.58%가 공제된 세액으로 1월에 한차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자동차

세는 일할계산을 하기때문에, 1월 4.58%, 3월 3.74%, 6월 2.49%, 9월 1.24%로 시간이 지날수록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의 변동 또는 폐차 말소시 경우에는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며, 주소지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 자료가 통보되지 않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